

# 日本經濟研究의 諸問題\*

中 村 隆 英\*\*

<目 次>

- I. 序
- II. 日本經濟의 「歷史性」
- III. 數量經濟史와 「長期經濟統計」
- IV. 近代經濟成長과 現代經濟分析
- V. 日本의 經濟發展과 現狀

## I. 序

日本經濟研究가 활발히 행해지게 된 것은 1920년대 이래의 일로서, 마르크스경제학의 연구가 왕성해진 것과 그 時期를 같이한다.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걸쳐서, 또 1950년대에 있어서 일본에서 가장 왕성했던 것은 마르크스경제학이었기 때문에, 日本經濟의 研究도 그 입장에 선 것이 主流를 이루었다. 마르크스이론 이외의 입장에 선 分析은 1920~30년대에 는 그렇게 많지 않으나 1950년대에 經濟成長理論이나 計量經濟學의 수법이 도입되면서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小論에서는 주로 1950년대 이후의 마르크스경제학 이외의 입장에서 본 일본경제분석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일본경제의 「歷史性」, 「特殊性」이라고 불리지는 문제에 대한 私見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몇 개의 토픽을 들어 일본에서의 일본경제연구에 대하여 요약하고자 한다.

## II. 日本經濟의 「歷史性」

1920년대부터 1950년대 즈음에 걸쳐서, 일본경제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른 「歷史的 性格」 내지 「特殊性」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팽배하였다. 가령 1868년의 明治維新 이후 일본은 資本主義經濟로 移行하였지만 그 후 60여년이 지나서도 일본의 경제는 「半封建的」인 農業

\* 本論文은 1987年 12月 8日 本研究所 주최로 열린 「국제심포지움: 日本經濟研究」에서 발표된 4편의 논문 중의 하나이다.

\*\* 東京大學 名譽教授

위에 基礎하고 있다고 하는 「講座派」의 理論(山田盛太郎, 『日本資本主義分析』)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농촌의 소작료가 특별히 높은 것은 封建制度가 殘存해 있기 때문이며, 농촌의 낮은 소득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이 낮으며 그 때문에 일본 국내의 수요가 적어 수출이나 해외로의 輸출을 강행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일본경제의 「歷史的」인 「特殊性」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상은 젊은 연구자들을 매료시켰다. 「講座派」와 대립되는 「勞農派」는 「半封建性」을 부정하였지만 일본경제에는 歐美的 경제와는 다른 「特殊性」, 「後進資本主義」國에 특유한 低賃金이나 그 속에서 급격히 진행되는 獨占 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예로는 서양경제사분야에 있어서 大塚久雄의 사상 (『近代歐洲經濟史序說』)을 들 수 있다. 大塚은 16~17세기의 영국에 있어서 自營農民(Yeomanry)의 手工業經營으로부터 자본주의경제가 자립적으로 발달했던 사실에 주목하였지만, 그것은 1930년대의 일본경제에 대한 암묵적인 비판이 포함되어 있었다. 굳이 말해 본다면, 그와 같은 바람직한 經濟發展의 길을 걸지 못하고 국가나 군부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經濟成長을 수행하고 전쟁에로의 길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마르크스경제학에 의한 日本經濟分析이나 大塚史學이 전쟁중에는 탄압받고 위축되어 있었지만 戰後에 脚光을 받았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有澤廣巳에 의해 주창되고 1957년의 『經濟白書』에서 다시 전개된 「二重構造」論도 일본의 「特殊性」論의 한 典型이었다. 그것은 戰後의 부흥이 일단락된 후 여전히 전체적으로 勞動力이 過剩이었다는 사실과, 1,000人 이상의 大企業과 5~20人의 中小企業 사이에는 前者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할 때 後者の 평균임금은 4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큰 임금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중요시하였다. 그 결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下請企業으로 삼아 낮은 가격으로 부품생산이나 제품가공을 맡기고 중소기업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구조가 완성되었으며 이때 중소기업노동자는 농촌의 小農民이나 도시의 零細業者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경제 부흥의 완료와 함께 경제성장률이 저하하고 노동수요가 침체상태에 빠진다고 하면 賃金隔差나 下請制와 같은 「特殊性」이 한층 격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다. 그 후 수년이 지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下請制의 성질도 변화하였기 때문에 「二重構造」의 악영향은 사라져 가고 그것을 둘러싼 논의도 약해졌지만 한때 그 문제는 일본 경제학계의 큰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상 3개의 예는 1930년대, 40년대, 50년대의 대표적인 「歷史性」, 「特殊性」論이다. 이들

이 각각 성립하게 된 배경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된 발상에 서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었다. 그것은, 약간 대담하게 요약한다면, 일본은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資本主義化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을지라도 歐美에 비교하면 아직 큰 간격이 남아 있으며 금후에도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라는 悲觀에 근거한 발상이었다, 이런 발상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경제의 「歷史性」이나 「特殊性」이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거론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의 高度經濟成長에 의해 이런 종류의 悲觀論에 근거한 「歷史性」論이나 「特殊性」論은 차차 힘을 잃어갔다. 「二重構造」가 變容되어 解消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戰後에는 W.W. Lockwood의 *Economic Development of Japan* (Princeton, 1954)을 시초로 하여 다른 시각에서 외국인의 눈으로 본 「歷史性」 내지 「特殊性」論이 등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例는 *Economist*誌의 특집, “Consider Japan”(1962), “The Risen Sun”(1967)이다. 특히 후자에서는 정부의 행정지도의 역할이 중시되고 일본의 성공을 산업정책의 결과로 보는 발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美國 商務省(Department of Commerce)의 『日本株式會社論』(1972년)이나 Chalmers Johnson의 “MITI” 등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기업이 자기의 의지를 갖지 못한 채 政府의 指導에 따라 행동한다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취해지고, 그로부터 일본의 경제는 自由經濟가 아니라 일종의 計劃經濟라고 하는 것과 같은 발상조차 나오고 있다. 동시에 日本의 高度成長이나 급격한 輸出의 增加가 가능하게 된 이유를 해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본경제의 一面을 과장한 「歷史性」, 「特殊性」이 주장되는 결과가 나왔다.

필자도 지금까지는 일본의 「歷史性」이나 「特殊性」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비중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1950년대 말부터의 高度成長속에서 解消되기 힘들다고 생각하였던 「二重構造」가 급격히 해소되었고, 그 발전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重工業이나 電子工業이 발전하는 것을 직접 目睹하면서 나타난 인식의 변화였다. 말하자면 歐美와의 經濟的 隔差를 강하게 느낄 때는 「歷史性」이나 「特殊性」을 중시하고 그 隔差의 축소가 명확해짐에 따라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보게 되었다고 해도 좋다. E.H. Carr가 말한 것처럼 역사는 그것이 쓰여진 시대의 여과장치(filter)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현재, 필자는 일본경제에 「歷史的 特質」이나 「特殊性」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은 세계의 各國이 저마다 「歷史的 特質」이나 「特殊性」을 갖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며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III. 數量經濟史와 「長期經濟統計」

일본경제사의 연구는 1910년대부터 시작되어 史料의 발굴과 분석작업이 착실히 진행되어 왔다. 이론적으로 전통적인 實證史學과 마르크스주의史學이 대립하면서도 1920년대 말부터 60년대까지는 後者が 그 主流을 이루었다. 특히 太平洋戰爭 後에는 研究者도 증가하고 研究의 對象時期도 1930~40년대까지 확대되었다. 현재는 1940년대 美軍의 占領期부터 1960년대의 高度成長期까지 연장되고 있다. 學派의 대립이 있다고 해도, 史實을 존중하며 밝혀진 事實을 공통의 전제로 해서 그 위에 연구를 축적해 나간다고 하는 점에는 물론 차이가 없으며, 단지 어떤 문제를 대상으로 택하며, 밝혀진 史實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자세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을 특히 부가해 두고 싶다. 이들의 業績은 主要한 것만 들어도 이미 방대한 양에 달하며, 그것을 소개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 범위를 넘어 선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20여년 간에 급격히 전개되어 온 새로운 分野로서 數量經濟史와 「長期經濟統計」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日本史에는 보통 明治維新 이전의 江戸時代를 近世, 維新 이후를 近代라고 부르고 때로는 태평양전쟁 이후를 다시 現代라 불러 時代區分을 하고 있다. 최근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진 분야는 數量經濟史分野로서 近世에 관한 數量的 資料를 발굴해서 그것을 統計적으로 처리하고 거기에 따라 새로운 歷史的 事實을 확인하고자 하는 數量經濟史의 방법이 개발되어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江戸時代의 일본은 幕府 아래 大名이라고 불리는 封建領主가 封土를 지배하는 체제하에 있었다. 그 前半인 17세기에는 農業生産도 人口도 증가하여 현저한 經濟發展이 이루어졌지만 18세기 이후는 인구도 정체하고 경제발전도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견해가 支配的이었다. 그렇지만 18세기에 經濟成長率이 둔화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주로 東日本의 寒冷化나 凶作 등에 기인한 것으로 西日本에서는 여전히 농업 생산도 인구도 증가하고 있었으며, 19세기 중엽 이후는 東日本에서도 경제발전이 再開되어 明治維新 이후로 이어진다고 생각되어 왔다. 江戸時代의 농촌에서는 綿, 누에고치, 藍, 紅花, 楮 등 상품화를 위한 작물의 재배도 증가하고 市場經濟가 일반화되었으며, 대개의 농민은 현금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兼業에 종사하였다. 또 각 藩의 財政은 상인으로부터의 借入金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專賣制를 실시하거나, 일부 상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이익을 上納하게 하는 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江戸時代의 움직임에 관한 대표적인 저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速水融의 『近世農村の歴史人口學的研究』(東洋經濟新報社)는 長野縣 諏訪지방의 농촌에 남아있는 인구자료를 사용하여 17~18세기의 同地方의 인구동태를 數量史的으로 해명하고, 多産多死에서 少産少死로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新保博의 『近代の物價と經濟發展』(東洋經濟新報社)는 江戸時代의 물가에 관해 남겨진 자료를 정리하여 그것으로부터 18세기 초의 低下, 1730년대 이후의 일시적 上昇, 그 후 1820년대 初頭까지의 완만한 低下와 거기에서 幕府末까지의 上昇이라고 하는 장기 경향을 검출하고, 그것을 幕府의 통화정책에 의해 설명하고 나아가 19세기 중엽부터의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西川俊作의 『日本經濟の成長史』(東洋經濟新報社)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경제사에 數量史의 기법을 적용하고 長州藩의 政策史나 근대적 경제성장까지 論及한 새로운 通史이다.

이외의 중요한 研究書로는 菊地常夫의 『新田開發』(至文堂), 齋藤修의 『プロト工業化の時代』(日本評論史), 天野雅敏의 『阿波藍經濟史研究』(吉川弘文館), 植村正治의 『近世農村における市場經濟の展開』(同文館), 논문은 梅村又次の 「幕府末の經濟成長」(『年報・近代日本研究』3) 등을 들고 싶다. 이런 종류의 연구목록으로는 上掲 西川の 저작에 있는 문헌목록을 참조하였으면 한다.

이상의 諸研究는 江戸時代의 경제발전의 성과가 그때까지 생각되어 오던 만큼 정체적인 것이 아니라 착실한 발전과정이었다는 것, 市場經濟의 原則이 이미 충분히 기능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明治이후의 經濟發展의 씨앗은 이 시대에 이미 심어져 싹트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한편, 明治 이후 태평양전쟁 직전까지의 經濟發展研究의 基礎가 된 經濟統計의 정리가 戰後 현저히 진전된 점에 대해 말해 두고 싶다. 明治 이래의 통계를 정리한 것으로서는 『明治大正國勢總覽』, 『日本財政詳覽』, 『日本貿易精覽』(以上 東洋經濟新報社), 『日本經濟統計總覽』(朝日新聞社)가 戰前에 발간되었다. 1920년대 이후 현대까지의 것으로는 『昭和國勢總覽』(東洋經濟新報社)이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있어서 戰後 최대의 성과는 大川一司, 篠原三代平, 梅村又次の 『長期經濟統計』 全 14卷(이 중 2卷은 未刊, *Long Term Economic Statistics*, LTES라 약칭)(東洋經濟新報社)이었다. 이 시리즈는 國民經濟計算(National Accounts)의 틀에 기초하여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분야(投資, 消費 등)에 관해서는 推計를 하여 1885~1940년이라는 기간의 국민소득통계를 生産, 支出 양면에서 작성하였다. 14卷의 내용은 國民所得, 人口와 勞動力\*, 資本스톡, 資本形成, 貯蓄과 通貨\*, 個人消費支出, 財政支出, 物價, 農林業, 鑛工業, 纖維工業, 鐵道와 電力, 地域經濟統計, 貿易과 國際

收支(\*는 未刊)이다. 또 그 내용을 한편의 책으로 요약한 Kazushi Ohkawa and Miyoei Shinohara (ed.) with Larry Meisner, *Patterns of Japanese Economic Development* (Yale U.P.)도 있다. 이 結果로 인해 明治維新 이래의 경제발전을 매크로한 숫자에 의해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였다. 더우기 西山千明, 朝倉孝吉 編, 『日本經濟の貨幣的分析』(創文社)이 明治 이후의 통화통계를 집대성하고 있는 것도 여기서 附加해 들 만한 것이다. 『長期經濟統計』에 대해서는, 부족한 자료를 이용해서 대담한 推計작업을 행한다고 하는 작업의 성질상, 精密度상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며 장차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推計는 대강에 있어서는 거의 타당하여, 거기서 묘사된 경제성장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만큼의 改訂이 행해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19세기말 이래의 日本經濟의 成長과 景氣變動의 狀況은 이 숫자에 의해 거의 명확하게 되고 分析의 基礎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 IV. 近代經濟成長과 現代經濟分析

Simon Kuznets의 소위 近代經濟成長이라는 것은 인구의 지속적 성장과 그 이상의 비율로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즉 1인당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19세기 말 이래의 일본의 경제발전을 추적하는 연구는 1950년대 이래 수많이 발표되었다. 그 주요한 작품에 대해 약간의 해설을 시도하고자 한다.

明治 이래의 成長과 循環에 대하여 LTES 그룹의 大川一司와 H. Rosovsky는 『日本の經濟成長』(東洋經濟新報社)에서 188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80년간에 걸쳐 20년 전후의 周期를 가진 4개의 長期波動(swing)을 발견하였다. 즉 Peak(山)을 P, Trough(谷)을 T라 쓴다면 다음과 같다.

1885→1897(P)→1901(T)→1917(P)→1931(T)→1937(P)→1956(T)→1962(P)

이 사이에 4개의 P와 3개의 T가 존재한다. 그런데 swing마다의 성장률은 차차 높아지는 것이 특징으로 大川과 Rosovsky는 이 현상을 趨勢加速(trend acceleration)이라고 하였다. 이런 견해는 戰時戰後의 큰 하락을 무시하는 대담한 것이지만 本書는 趨勢加速을 資本과 勞動의 投入, 그 質的 變化, 技術進步, 產業構造의 變化(近代部門과 在來部門의 구성), 貿易 등의 主要인을 통해서 數量的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手法은, 기본적으로 이 입장을 받아 들이면서 일층 포괄적인 이론을 전개한 南亮進의 『日本の經濟發展』(東洋經濟新報社)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南은 需要面에서는 國內市場, 특히 投資의 增加와 그것을

지탱하는 저축의 增大를 중시하고 供給面에서는 산업구조의 근대화화와 노동생산성의 증대가 趨勢加速을 지탱하였다고 결론지으며 그것이 戰後의 高度成長期에도 계승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南은, 1960년대 초에 일본경제는 노동력 과잉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을 중시한다(南亮進, 『日本經濟の轉換點』, 創文社).

成長에 주목하는 이런 종류의 분석은 몇 가지의 시각을 경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景氣變動, 經濟政策, 産業과 産業組織, 勞動 등 경제발전의 동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외의 다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종류의 작업을 검토해 보자.

景氣變動에 대해서는 篠原三代平의 『日本經濟の成長と循環』(創文社), 藤野正三郎의 『日本の景氣循環』(勁草書房) 등이 있다. 진자는 成長의 要因과 景氣變動을 결합시켜 대담한 가설을 제시한 저자의 젊은 시절의 대표작이다. 후자는 明治 前期에서 현재에 이르는 경기순환을 4半期 데이터에 의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 歷史, 統計, 理論을 종합하고자 한 작품으로 貨幣的 要因을 중시하고 있다. 또 경기 분석에 있어서는 보다 단기의 景氣指數(diffusion index)를 이용한 馬場正雄의 『景氣豫測と企業行動』(創文社) 등이 있고 또 여기서 詳述할 여지는 없지만 수많은 計量經濟學的 모델에 의한 분석이 존재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經濟政策의 研究에 대해서는 經濟成長의 出發點인 1880년대의 財政政策과 産業政策을 검토한 梅村又次, 中村隆英 編의 『松方財政と殖産興業政策』(國際連合大學, 東京大學出版會), 室山義正의 『近代日本の軍事と財政』(東京大學出版會), 小杉正彬의 『日本工業化と官業拂下げ』를 들 수 있다. 梅村, 中村의 編著는 1880년대 前半의 화폐제도의 개혁과 재정긴축정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前後의 경제정세나 정치에 대해서도 論及하고 있다. 室山の 저작은 松方正義에 의한 재정긴축의 原史料에 기초한 모노그래프, 小杉의 저작은 동일한 시기에 이뤄진 정부경영의 광산, 공장 등의 민간에의 拂下 경위와 의의를 논한 것이다. 金融史는 政策史 중에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분야이지만 새로운 작품 중 寺西重郎의 『日本の經濟發展と金融』(岩波書店)은 19세기 후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금융제도 및 정책기능에 대하여 중요한 데이터와 새로운 금융이론을 구사해서 분석한 勞作이다. 山口和雄 編의 『日本産業金融史研究』製絲金融編, 紡績金融編, 織物金融編(東京大學出版會)의 3책은 견실한 實證의 대표작이라는 고전적인 평가가 내려져 있다. 金融制度面에서 朝倉孝吉의 『明治前期金融構造史』(岩波書店)는 明治 초기의 은행을 시초로 하는 諸金融機關의 출자자나 경영에 관한 선구적 업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泷谷隆一 등의 실증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日本銀行이 편찬한 『日本銀行百年史』는 최신의 성과이다. 現狀에 대해서는 鈴木淑夫의 『金融政策の效果』,

『日本金融經濟論』(東洋經濟新報社),堀内昭義의 『日本の金融政策』(東洋經濟新報社), 巖山昌一の 『日本の金融システム』(東洋經濟新報社), 岩田一政, 浜田宏一の 『金融政策と銀行行動』(東洋經濟新報社) 등을 대표적인 작품으로 밝혀두는 정도로 한다.

財政史 연구는 大藏省의 손으로 이뤄진 『明治財政史』, 『明治大正財政史』, 『昭和財政史』, 『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和まで』, 각 20卷, 합계 80卷이 기본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 외에 室山の 前掲書, 佐藤進, 宮島洋의 『戦後稅制史』(稅務經理協會), 吉岡健次の 『日本地方財政史』, 『戦後地方財政史』(東京大學出版會) 등이 새로운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財政의 機能이나 政策에 대해서는 貝塚啓明의 『財政支出の經濟分析』(創文社), 市川洋, 林英機의 『財政の計量經濟學』(勁草書房), 野口悠紀雄 外의 『豫算編成における公共的意志決定過程の研究』(大藏省印刷局), 石弘光의 『租稅政策の經濟效果』(創文社), 佐藤進의 『日本の稅金』(東京大學出版會), 宮島洋의 『租稅論の展開と日本の稅制』(日本評論社) 등을 들 수 있다.

노동경제학 분야에서는 梅村又次の 『勞動力の構造と雇用問題』(岩波書店), 小野旭의 『戦後日本の賃金決定』(東洋經濟新報社), 尾高焯之助의 『勞動市場分析』(岩波書店) 등이 雇傭問題와 賃金에 관한 대표적 작품이다. 賃金決定에 관해서는 勞動供給의 기초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小尾惠一郎의 「家計の勞動供給の一般理論について」(三田學會雜誌, 1979년 2월)를 들고 싶다. 小池和男의 『日本の熟練』(有斐閣), 『職場の勞動組合と参加』(東洋經濟新報社), 白井泰四郎의 『企業別勞動組合』(中公新書), 神代和欣의 『轉換期の賃金交渉』(東洋經濟新報社) 등은 일본의 勞動組合, 勞使關係, 勞動의 實態 등에 대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農業에 대해서도 LTES의 성과를 이용하여 그 成長과 生産構造에 대한 연구가 전개되었다. 速水佑次郎의 『日本農業の成長過程』(創文社), 『農業經濟論』(岩波書店)은 뛰어난 성과이다. 그 기법은 Schultz 등의 고전적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일본농업도 역시 해외의 사례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동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土屋圭造, 秋野正勝, 唯是康彦 등과 공동으로 진행되어 각각의 연구성과가 존재한다는 점과 이 방향의 연구는 大川一司에 의해 1930년대부터 개발되어왔음을 附加해 둔다. 또 梅村又次の 『賃金・雇用・農業』(大明堂)은, 보다 넓은 노동시장이라는 視點에서, 국제비교를 행하면서 농업의 위치를 부여한 연구이다. 농업문제는 주로 土地所有(地主制)의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근래에 올수록 이와같은 다채로운 시각이 취해지게 되었다. 이것은 역시 1940년대 후반의 農地改革의 성과가 검토되고, 농업문제의 重點이 生産性 向上과 他부분으로의 노동력 流出, 농업인구의 감소로 변해온 사실에 대응되는 것이었다.

산업의 분석에 대해서는 몇 개의 새로운 展開가 나타났다. 産業史 측면에서는 隅谷三喜



男의 『日本石炭産業分析』, 高村直助의 『日本紡績業史序說』上, 下(稿書房), 石井寬治의 『日本蠶絲業史分析』(東京大學出版會), 山崎廣明의 『日本化纖産業發達史論』(東京大學出版會), 武田晴人の 『日本銅産業史』(東京大學出版會) 등이 있다. 山口和雄의 『明治前期經濟の分析』(東京大學出版會)은 明治前期 産業構造의 歷史로서 특색이 있으며 篠原三代平의 『産業構造論』(筑摩書房)은 이 문제의 概說로서 편리하다. 産業組織의 歷史로서는 經營史의 각도에서 財閥史연구가 進行되어 일본경영학회에서 각 재벌에 대한 개별연구가 출판되고 있다. 카르텔에 대해서는 武田晴人, 稿本壽郎이 共編한 『兩大戰間期日本のカルテル』(お茶の水書房)이 두드러진다. 산업조직론과 산업정책론은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분야이다. 植草益의 『産業組織論』(筑摩書房), 今井賢一の 『現代産業組織』(岩波書店), 鶴田俊正의 『戰後日本の産業政策』(日本經濟新聞社), 小宮隆太郎, 奥野正寬, 鈴木興太郎이 共編한 『日本の産業政策』(東京大學出版會) 등이 그 대표적 작품이다.

이상의 분류에 들지 않는 주요한 작품으로서는 新古典派의 입장을 견지한 小宮隆太郎의 『現代日本經濟』(東京大學出版會)가 있고, 뛰어난 計量經濟學的 研究로서는 辻村江太郎의 『消費構造と物價』(勁草書房), 渡部經彦의 『數量經濟分析』(創文社), 內田忠夫의 『日本經濟論』을 들고 싶다. 그것들은 1960~70년대의 작품으로 현실태와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발전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諸研究는 近代經濟學의 입장에 선 뛰어난 研究業績 중 극히 소수를 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업적은 과거 30년간의 연구를 거의 대표한다고 할지라도 세부적인 것에 들어가면 이보다 수십배의 문헌목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실로 새로운 학설을 받아들여 내용이 크게 변하여 왔지만 대체로 일본경제를 소재로 해서 이론모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역시 경제학과 현실의 경제정책 간의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 V. 日本의 經濟發展과 現狀

이상에서 일본에서의 일본경제연구를 개관하였지만 일본경제의 歷史와 現狀에 대한 私見을 요약함으로써 이 小論을 마치고자 한다. 필자의 견해는 다음의 拙著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그것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戰前期日本經濟成長の分析』(岩波書店), 『日本經濟—その成長と構造』 및 『明治大正期の經濟』(東京大學出版會), 이 3책은 19세기말 이후의 일본경제의 개관을 시도한 것으로 앞의

두권은 英譯되어 있다. 또 『昭和恐慌と經濟政策』, 『日本の經濟統制』(日經新書)는 前者가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전반, 後者가 1930년대 말부터 40년대에 걸친 경제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일본의 「工業化(industrialization)」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에는 다음 몇가지의 혜택받은 요인이 있었다. 18세기 중엽 이후의 市場經濟의 發展, 아시아諸國보다 높은 농업의 토지생산성, 庶民教育의 보급, 在來工業(특히 鍛造, 金屬加工 등)의 높은 기술수준 등이 그것이다. 1854년 開國을 한 후 일본은 급격히 국제경제속에 포섭되었으며 또한 급격히 西歐의 制度와 技術을 도입하여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여기서 그 역사에 대해 상세히 말할 여유는 없다. 이하에서는 화제를 다음의 항목에 한정해서 근대일본경제에 대한 私見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 1) 産業構造의 變化
- 2) 換率과 貿易
- 3) 經濟發展에 있어서의 政府와 企業
- 4) 戰前・戰後의 經濟比較
- 5) 高度成長의 要因과 歸結

### 1. 産業構造의 變化

일본의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을 과거 약 1세기를 그 시기로 잡아 특징지워 보고자 한다. 일본은 明治維新 당시 인구의 80% 가까이가 농업에 종사하고 職人, 關所 등 도시인구는 조금 뿐이었다. 이후 근대화의 진전과 함께 인구는 점차 제 2차, 3차산업으로 이동하였지만 그러나 바로 공장이나 은행, 商社, 병원, 관청과 같은 근대적 조직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었다. 18세기부터 농민의 다수는 상업(仲買, 行商 등), 공업(목수, 미장이, 술·간장제조, 직물, 桶樽職 등), 서비스(小運送, 家事집부름 등) 등의 넓은 범위에 걸쳐 겸업을 영위하였다. 명치유신 이후 이러한 전통적인 생활용품의 생산, 유통과 관련된 전통적 산업(在來産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농업지역에 읍이나 도시가 형성되며 그와 함께 재래산업을 겸업하고 있던 농민도 농업을 떠나 재래산업을 專業으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업 인구는 거의 1400~1500萬인 채로 존재하고, 증가한 인구의 대부분은 재래산업에 흡수되었다. 1920년의 인구조사에 따라 필자가 추계한 바로는 농림수산업 1,511萬人, 공장, 商社, 은행, 의료, 해운, 정부 등 근대부문 389萬人에 대해 재래산업은 859萬人을 흡수하고 있었다. 명치유신후 방직, 탄광, 製銅, 조선, 기계, 화학, 무역, 해운 등 각종의 산업이 移植되었을지라도 그 고용량은 제 1차 세계대전 후에도 여전히 全有業人口 2,726萬人的 14%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재래산업은 전통적 기술에 의해 傳統的 生活用品의 生産과 流通을 담당한 분야였기 때문에 技術이나 生活樣式의 變化가 進行됨에 따라 그 분야를 근대산업에 양보하고 축소되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경후는 1930년 경에 보이기 시작하여 1950년대 후반 이후 그 경향은 한층 확실해지고 있었다. 1950년대 말부터는 農業人口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소위 高度成長의 時代는 農業과 在來産業의 축소, 近代産業의 급격한 발전의 시대였다.

근대산업에 대해 약간의 보족을 더하면, 일본의 근대산업은 명치정부에 의해 철도, 은행, 통신 등의 분야가 先行하고 이어서 비교적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이 勃興하였다. 그러나 철강업을 시초로 하는 중화학공업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상의 곤란과 국내 수요의 불안정과 수입품과의 경쟁력 부족 때문에 제 1차 대전까지는 자립의 가망이 없었다. 歐美에서의 수입이 단절된 1910년대 후반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이들 산업은 1920~30년대에 발전의 전망이 보이게 되고 제 2차 대전 후에는 해외의 기술을 받아 급성장하였으며, 고도성장을 지탱한 산업이 되었다. 근대산업의 발전을 가져온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가격기구(price mechanism)였다. 1960년대에 國際資源價格은 製品가격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대량의 수입원자재에 의존하는 철강업, 석유精製業 등이 해안에 입지한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급속하게 발전하여 고도성장을 주도하였다. 電氣機械, 자동차 등은 이것에 잇따른 형태로 신장되어 갔다. 그런데 1970년대 전반의 제 1차 석유쇼크에 의해 국제 原材料價格이 急騰하여 제품가격을 상회하는 상승을 나타냄에 따라 수입 원재료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중화학공업의 이점은 사라졌다. 이에 대신하여 加工度가 높고 부가가치가 큰 기계공업의 지위가 높아졌다. 현재 일본의 수출의 8할 가까이를 기계공업제품이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또 1960년대 이후 노동력의 부족이 심하게 되어 임금이 높아졌을 때 기계공업의 노동생산성이 상승하고 임금에 비해 기계의 상대가격이 저하하였기 때문에 단연코 노동절약적인 기술이 각 분야에서 채용되었던 것도 산업구조의 전환을 촉진하였다. 오토메이션의 보급, 自動機의 개발, 산업용 로봇의 증가 등은 모두가 그 예이다.

제 3차 산업화의 進展도 또한 일본의 특징으로 특히 1970년대에 그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것은 1960년대부터 노동자와 사무직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도시와 소도시, 세대주의 연령차이, 농가와 비농가 등의 소득의 격차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축소되어 전국의 소비가 대도시型的 소비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로 나타나거나 광고, 컴퓨터, 警備 등 기업방면에서의 서비스 수요가 출현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산업구조는 경제메카니즘에 민

감히 대응하면서 변화해 왔다.

## 2. 換率과 貿易

일본의 대외경제를 결정하는 두가지 요인으로 外換市場과 加工貿易을 들 수 있다. 戰前에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제 1 차 세계대전 당시를 별도로 하면 1885~1895년과 1930년대 前半이었다. 이 두 시기에 공통되는 점은, 두 쪽 다 換時勢의 下落과 交易條件의 惡化아래 輸出이 急伸張하고 한편에서는 高價로 된 수입품을 대체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19세기에는 綿紡績業, 20세기에는 機械工業이나 化學工業)이 성장하는 시대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1897~1931년의 金本位制時代 중 세계대전期 이외의 시기에서는 오히려 수출의 신장이 작아지고 國際收支의 위기가 점차 커져 外債의 도입에 의해 겨우 극복되는 장면이 자주 보여졌다. 물론 交易條件의 악화 자체는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개발도상국의 공업화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사태이었는데도 모른다. 戰後에 있어서 1949~71년 사이는 1달러=360엔이라는 환율이 유지되었다. 1950년대까지는 이 환율이 지속되었지만 약간 엔화가 高評價되어 수입초과의 경향이 강하였는데 1960년대 후반 이후는 國際競爭力이 강화되고 국제수지의 흑자가 정착되었다. 1970년대초의 일본은 오히려 자기의 국제경쟁력을 과소평가하고 360엔대의 환율유지를 고집하였지만 이후 환율의 상승에 조금씩 익숙해져 比較生産費가 낮은 상품의 輸出에 特化해 나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계 등의 수출에 특화하는 것은 거의 모든 자원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세기에 들어설 무렵부터 일본은 면화를 수입하여 면제품을 수출하는 加工貿易으로 그 경제를 유지하여 왔다. 일찌기 生絲, 석탄, 銅 등의 자원의 수출국이었던 일본이 현재는 석유, 석탄, 각종 광석, 식량, 飼料, 면화, 양모 등 거의 모두를 수입에 의존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것을 加工한 製品의 일부를 수출해서 수출입을 均衡시키고 다른 수입품을 內需에 충족하고 있다. 기초적 원재료는 물론, 식량조차도 해외에 의존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農業 등에서는 국내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保護政策을 취해왔을지라도 그 방벽은 차차 붕괴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比較生産費原理에 의해 설명되지만 동시에 일본경제가 무역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아가서는 安全하게 자유로운 무역을 보증하는 국제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본에게 있어서 불가결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 3. 經濟發展에 있어서의 政府와 企業

일본의 經濟發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였다는 것이 누차 지적되고 있다. 明治 정부의 「殖産興業政策」이나 제 2 차대전 후의 「産業政策」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

런 이유 때문에 일본의 기업은 정부의 지시 아래 경영을 행하며 自主性이 부족한 것처럼 오해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역시 自由企業制度를 취하는 나라이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손실을 입어도 그것은 기업의 책임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되며,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하등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또한 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188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고 幼稚産業의 보호육성과 불황대책이 중심이었다. 그런데 방적업계 등에서는 정부의 간섭을 혐오하여, 鐘淵紡績會社 사장이었던 武藤山治 등은 정부의 보호에 의존하는 산업을 實業이 아닌 虛業이었다고 매도할 정도였다. 三井, 住友 등의 재벌도 역시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고 또한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었다.

1930년대부터 軍需産業 내지 그 기초산업에 대한 보호육성이 진행되고, 戰後의 經濟復興을 위해 産業金融, 設備投資減免稅, 독점금지법의 완화, 個別産業育成, 외국기술 도입의 장려 등의 諸政策이 취해졌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역시 기업의 자금력과 기술력이 여전히 약하였던 1950년대의 일이고, 그 이후는 그 효과가 차차 약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960년대 資本自由化에 수반한 외국자본의 국내로의 진입을 염려하여 大型合併이 장려되고 八幡=富士, 日産=프린스 등의 합병이 실현되었지만 通産省이 기도했던 特定産業振興法이 결국 성립되지 않았던 것은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단지 석탄 등의 쇠퇴산업이나 1970년대 후반 이후의 造船, 알루미늄 등의 不況産業對策은 그 이후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도 좋다.

이상을 종합하면, 일본에 있어서의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歐美에 비하면 밀접한 면이 있다고는 해도 기본적인 自由經濟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特定の 시기, 혹은 特定の 對象産業에 대하여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업측도 그것을 바랄 때에 취해진 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대표시키 고자 하는 것은 역시 과장이기 때문이다.

#### 4. 戰前・戰後의 經濟比較

일본경제는 中日戰爭, 태평양전쟁, 나아가 戰後의 「民主化」 정책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변화하였을까. 바꿔 말하면 戰前과 戰後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속과 단절이 존재하였는가, 또한 고도성장과 그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것이 여기서의 과제이다.

1930년대 前後의 일본 사회는 아직 19세기형 자본주의의 모습을 많이 남기고 있었다. 기업의 大株主 다수는 대부호이자 많은 회사의 중역을 兼務하였으며, 노동자의 임금은 여전히 낮아 그 생활은 빈곤하였다. 농촌에 있어서 지주의 지위는 높고 소작료율은 고율이어서 농민 특히 소작농의 생활은 비참하였다.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의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

고 정의가 頻發하였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30년대 이후 그 상황은 조금씩 개선되었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역시 戰後 점령군의 손에 의한 「民主化」 정책, 勞動運動의 장려와 農地改革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바이다. 그것에 의해 노동자와 농민의 지위가 개선되고 국내의 소비수요의 증대가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戰後의 인플레이션, 高所得者의 높은 稅負擔率 때문에 戰前 이래의 부호의 지위는 매우 저하되었다. 전체적으로 일본에서의 개인별 소득분포는 현저하게 평등화되었다. 현재의 일본은 노동자와 사무직원,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소도시, 대기업과 소기업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 소득분배가 평등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일본적 경영—終身雇傭, 年功序列型賃金, 企業別勞動組合, 이 세 가지 제도를 기동으로 하는 노사관계가 성립한 것은, 戰前 이래 企業一家主義의 사상 위에 戰後의 노동조건 향상이 결합되어 노사분규의 회피를 노사 쌍방이 바랐기 때문이다. 戰前과 같이 빈부의 차가 심한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는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1950년대까지는 기록에 남을 만한 大爭議가 계속 반복되어 노사 쌍방이 모두 큰 타격을 받았다. 일본적 경영은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성립된 戰後社會의 산물이었다.

민간경제계에 대한 정부의 介入과 그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前項에서 언급하였지만 戰後의 이른바 행정지도의 起源은 戰時經濟統制에서 구할 수 있다. 이 시대에는 정부의 심한 통제 아래, 기업은 정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상황속에 처해지고 금융기관도 大藏省과 일본은행의 지령을 遵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도 1950년대까지는 기업의 힘이 약하고 관청의 영향력이 강하였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침투할 수 있었다. 금융정책의 면에서 유명한 窓口指導 등도 일종의 행정지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힘이 1960년대에 들어설 무렵부터 쇠퇴하였던 것은 戰時 이래 환경이 변화하여 기업의 自立性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의 반영이었다.

다만 戰後의 중화학공업화는 실로 戰時經濟의 「遺産」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시에 하에 형성된 生産設備과 養成된 대량의 기술자나 숙련노동자의 대부분은 戰後에 그대로 남아 해외의 기술을 도입하여 高度成長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였다.

##### 5. 高度成長의 要因과 歸結

고도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世界經濟의 순조로운 發展이었다. 1950~65년까지의 세계 GDP 성장율은 5%에 달하였다. 그런 환경 하에서, 높은 輸出成長率을 달성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수입을 확보하여 加工貿易型의 경제발전을 완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輸入原材料 價格의 저하가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에 있어서 또 하나의 유리한 조

건이었다.

국내에 있어서는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의 민첩한 적응과 강력한 경영태도를 들지 않으면 안된다. 戰後에 財界지도자의 공직 추방 후 경영을 인계받은 젊은 지도자는 技術의 導入이나 設備投資를 적극적으로 행하였다. 또한 가령 임금이 상승하고 기계의 가격이 저하한다고 여겨지면 노동절약적인 기술로 전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기업인의 격렬한 경쟁은 종종 過當競爭이라 불려졌지만 그로 인해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상승 및 수출의 확대도 가능해졌다.

한편 고도성장은 많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도 잊어버릴 수 없다. 가령 石油化學工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主產物인 에틸렌의 용도가 개발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부터 판매용 폴리에틸렌봉지까지 그 용도가 확대되고 플라스틱 가공업자가 증가한 것은 그 한 예이다.

고도성장은 급격한 經濟構造의 변동을 가져왔다. 所得水準의 上昇, 都市로의 人口集中, 농촌의 인구감소, 新幹線이나 고속도로망의 확충, 西歐스타일로의 소비양식의 급격한 변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동반해서 발전하는 산업과 쇠퇴하는 산업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앞에서 서술한 재래산업의 다수는 轉業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반대로 새로운 산업이 수많이 출현하였다. 小賣業의 슈퍼마켓化, 注文洋服店의 쇠퇴와 量產既成服産業의 확대, 철도수송에서 트럭수송으로의 변화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석유쇼크에 의해 고도성장은 終末을 告하였다. 좁은 의미에서 일본의 현대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성장이 가져온 변화는 이미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현대 일본경제에 대한 고찰은 다른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